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6
----------	------

제출연월일 : 2017. 0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퇴직전 준비휴가 조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 특별휴가 적용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1조)
- 나. 퇴직준비휴가 기간 확대(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
- 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의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생략

- 가.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호
- 나. 사 유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가. 협의기간 : 2017년 7월 3일 ~ 7월 6일(4일간)

- 협의내용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여성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2월” 을 “3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양희영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최용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영란 (790-506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	제21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u>여성 공무원</u> 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u>공무원</u> 은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u>2월이</u>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휴가를 얻을 수 있고,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 ----- <u>3월이</u> -- ----- -----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3(특별휴가)

-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

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